

본 자료는 8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8월 26일(월)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8. 26	담당부서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담당자	김경유 연구위원 (044-287-3125)		

- 산업연구원 정책세미나 -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 일시 : 2019. 8. 26 (월) 14:00-17:00
- 장소 :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
- 주최 :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은 2019. 8. 26(월) 14:00~17:00 엘타워 멜론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제조업 공급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요인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번 세미나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송용설 (주)아모그린텍 부사장, 심풍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진우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 오영해 정책협력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발표자료 원문 붙임 참조)

- 제1주제는 산업연구원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글로벌 분업구조 하의 한국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발표한다. 조철 본부장은 “미중 분쟁,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수출 규제 등 세계 산업통상환경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우리 산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다. 조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가속화, 이에 따른 일본의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급변하는 산업통상환경 및 GVC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변화되는 가치사슬 하에서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제2주제는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이준 실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기업 및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밸류체인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혁신공급방식의 전면적 전환, 둘째, 기술정책과 비기술정책 간 조화, 부처 간 협업·연계 강화 등 정책 최적 조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셋째,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 강화, 넷째, 책임있는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제3주제는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이 “자동차산업을 통해 본 수입대체 전력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김경유 실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어 대일 수입부품의 경우 모기업 조달정책 등 경영상 요인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의존도도 낮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기존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제4주제는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의 중소기업 영향과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박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은 대체품 확보와 생산 및 재고비용 증가 등의 애로를 호소하며, 거래정보 제공과 신속한 수입허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소기업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첫째, 주요산업 생산 네트워크 위기관리 점검, 둘째,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별 지원 우선순위 설정 및 “탈추격·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셋째, 강건한 공급망 지속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 행사 일정표는 별도 첨부된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주요 발표 내용

“글로벌 분업구조 하의 한국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 - 산업연구원 조 철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 미중 분쟁,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수출 규제 등 세계 산업통상환경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반한 우리 산업에 많은 변화를 요구
 - 우리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에 사용하는 중간재 및 자본재 위주로 수출 및 수입을 하여 전후방 GVC 참여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가속화, 이에 따른 일본 산업기반 약화 초래

- 급변하는 산업통상환경 및 GVC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
 -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가 경쟁우위를 지닌 품목은 소재부품, 장비, R&D 등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여 초격차 전략 추진
 -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등과 다른 제품을 출시하는 차별화 전략 추진
 - 가치사슬전략에 있어 효율이 높은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보다 강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 확충
 - 변화되는 가치사슬 하에서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

□ 붙임2: 주요 발표 내용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과 우리 소재·부품산업 대응 전략” - 산업연구원 이 준 소재산업실장 -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규제 품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규제 영역의 범위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 다만 현재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확인될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업 및 산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질서있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의도가 분명한 만큼, 이번 위기를 단순한 조달선 다변화 차원을 넘어 강건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글로벌 강소 전문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밸류체인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혁신공급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
 - 그리고 기술정책과 비기술정책 간 조화, 부처간 협업·연계 강화 등 정책 최적 조합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로는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붙임3: 주요 발표 내용

“자동차산업을 통해 본 수입대체 전력의 시사점”

- 산업연구원 김경유 시스템산업실장 -

- 최근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자동차부품산업은 국산화 전략을 통해 비교적 잘 성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동차부품산업은 생산액 기준 글로벌 5위의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글로벌화를 통해 발전
 - 대일 수입부품의 경우 모기업 조달정책 등 경영상 요인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의존도도 낮은 편
- 우리 자동차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
 - 초기 부품국산화 정책은 조립업체가 수입부품을 선호하여 실패하였으나 시기와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키며 수행
 - 독자 승용차 개발 시 개발단계부터 조립업체와 부품업체 간 긴밀한 관계유지와 기술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진전
 - 이후 부품업체의 기술역량 제고가 가능한 품목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국산화 전략 수행
-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기존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 국산화 대체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 소재부품 원천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 도입 필요

□ 붙임4: 주요 발표 내용

“일본 수출 규제의 중소기업 영향과 정책 과제” -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 -

-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부품·소재·장비 수입 차질에 따른 “직접 영향”과 공급망 내 원청기업의 수요 위축에 따른 “과급효과”, 타 공급망의 생산 차질에 따른 “전염효과”로 구분
-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2차전지가 가장 크며, 반도체, 기계, 핸드폰/통신장비, 석유화학 순 *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계 등의 업종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수요 기업의 정책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부문과 대체가능성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차별적인 대응 전략 필요
- 중소기업은 대체품 확보와 생산 및 재고비용 증가 등의 애로를 호소하며, 거래정보 제공과 신속한 수입허가 등의 지원을 요청, 대체재 확보를 위해 자동차, 조선은 3개월 이내, 핸드폰/통신장비의 경우 6개월 이내, 철강은 1년 이내를 예상하며,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석유화학은 최소 1년 ~ 2년을 전망
-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주로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에 따른 애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근본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
- 근본적 대응으로서 대·중소기업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정책방향을 제안
 - ① 주요산업 생산 네트워크 위기관리 점검
 - ②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별 지원 우선순위 설정 및 “탈추격·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 ③ 강건한 공급망 지속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 발표자 주요 약력

○ 산업연구원 조 철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 (2019 -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위원
- (2019 -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산업연구원 이 준 소재산업실장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소재산업실장
- (2019 -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
- (2018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검토위원회 위원
- (2017 - 현재)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자문위원

○ 산업연구원 김경유 시스템산업실장

-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연구위원
- (2016 - 현재) 국토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위원

○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

-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 (2019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금융·관료분과 전문위원
- (2019 - 현재) 국세청 내부평가위원